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與野, '5·18' 헌법 전문수룩 공감... 시기·방식 온도차

국민의힘 “尹 대통령 공약 이행
실천적 방안 강구해 나갈 것”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촉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1987년 직선제 개헌 과정 당시부터 요구가 나온 5·18 헌법 전문 수룩이 22대 총선의 화두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목숨 바쳐 투쟁한 현장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폭력의 현장”이라면서 “국가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약속을 하고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국가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룩은 (20대) 대선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 건을 내년 22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

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슈 피우기에 집중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11월 10일 5·18 정신에 대해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고,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나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저

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강구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달라고 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룩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오월 정신 ‘훼손·모독’ 행위 배격”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논평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전진 강조

여야가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아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이들을 배격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는 간절히 기억하는 자에 의해서 쓰인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5월의 광주를 늘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받들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며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특정세력에 이용되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폄훼되기도 했다.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거나, 절대로 폄훼되어서도 안 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5·18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어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며칠 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에 대해 검찰이 처분을 변경함으로써 명예회복 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5·18이 현재 진행형인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제대로 아물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이 있다면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과연 지금의 우리가 80년 5월 그날의 광주를 살아냈

면,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총칼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을까 자문해 본다”며 “그렇기에 오월의 광주는 아무리 깊어도 깊을 수 없는 ‘마음의 빛’이자, 군부독재라는 짙은 어둠을 깨친 ‘역사의 빛’”이라고 소개했다.

강대변인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숭고한 희생을 여전히 왜곡하고 폄훼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여당과 보수진영 인사의 5.18 망언은 위대한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당은 오월 광주의 진실을 밝히겠다. 완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앞장서겠다.

더 뿌리 깊은 민주주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5월 광주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정신이다. 그러나 오월 정신이 이 시대에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면서 “아직도 오월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정부와 여당에 준동하고 있다. 이들을 제대로 퇴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월정신에 먹칠을 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압류방지통장’ 개설 범위 확대”

“전 국민 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취약계층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복지킴이 통장’ 등으로 불리는 압류방지통장은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초수급권자만 개설이 가능하다. 압류방지통장엔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된다.

민사집행법은 기초수급권자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원)’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측 입장을 파악하는 논의과정을 거쳤다.

긴급토론회에 참여한 전영훈 서울

금융복지센터 상담관은 “채무자는 소득활동이 필수이나, 급작스러운 예금 인출 정지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추심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중단한 채 사회와 장기 단절하는 요인이 된다”며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특정대상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누구나 일반(국책)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태홍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최종심 판결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당선 무효 처리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재판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가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지만 회계책임자 A씨는 1심보다 200만원 더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무죄가 유지됐으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게 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